



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	2008.12.2(화) 배포시		
배포일시	2008. 12. 2(화) 10:30	담당부서	예산실 예산제도과
담당과장	조 규 홍 (2150-7130)	담당자	천재호 서기관(2150-7131)

제목: 민생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

◇ 2009년 예산 확정이 지연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지연 우려

- 저소득층·서민 생활 안정 관련 예산
 - 저소득층 대상 자활사업(2,899억원), 아동발달지원 서비스(719억원), 장애인 사회활동도우미(1,081억원), 노인일자리 사업(1,078억원) 등
- 일자리 창출 및 실업 관련 예산
 -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확대(1,262억원), 전직실업자 훈련·취업 알선(2,752억원), 훈련중 생계비 대부(596억원) 등
-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 예산
 - 긴급경영안정 자금(6,000억원) 및 소상공인 지원(4,000억원) 정책자금, 수출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수출보험 출연(2,600억원) 등
- 지방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
 -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, 산업단지 도로 등 추가 SOC 지출 4.6조원 중 90% 수준을 지방에 투입

② 예산집행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

- 내년에 예상되는 上底下高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,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는 정부의 대책에 차질 발생
 - 중앙정부
 - 예산 확정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약 30일이 소요되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집행준비 부실
⇒ 연도중 잦은 계획변경 등 부작용과 비효율 초래
 - * 예산 확정후 예산공고 → 집행계획 수립(각부처) → 분기별 배정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 작성(기획재정부) → 국무회의 의결
 - 지자체
 -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이 미확정되어 최종예산 편성 지연
 - 중앙정부 예산확정 후 반복적인 추경 편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
 - 일부사업은 길게는 6개월 이상 추진 지연

○ 예년의 지연사례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

- 2001년 이후 1회*를 제외하고는 매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어 왔으나,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정부안을 토대로 사전 준비를 하여 예산확정 후 조속한 집행이 가능하였으나
 - * 2003년 예산안은 대선 관계로 조기 확정('02.11.8일)
- 2009년 예산안의 경우 여야간 입장이 현격해 예산안 확정전에는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힘든 상태

③ G-20의 공조사항의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

- 11.15일 G-20 금융경제 정상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
-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노력에 적극 호응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이나, 우리나라만 뒤쳐질 우려
 - * 미국의 경우 부시행정부가 의회에 7,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구제금융법안을 제출한지 2주만에 하원에서 수정안 가결

기획재정부 대변인